

여권 내 유력 인사들 인력 재배치 일단락

이낙연 총리 선대위원장 맡을 듯... 불출마 현역 의원 13명 개각 통한 복귀 인사 제한적 전망... 유은혜·김현미 장관 변수

국회의장 출신의 6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17일 국무총리 후보자에 지명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여권의 '인적 배치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5일 법무부 장관에 민주당 대표를 지낸 주미애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정 후보자를 '국정 2인자'로 발탁함으로써 안정감 있는 내각을 꾸리게 됐다.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선 '이낙연 역할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선두를 달리는 이낙연 총리에게는 공동 선대위원장 등 중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내년 총선의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앞으로 한 달 뒤인 내년 1월 16일인 만큼 당분간 개각을 통해 당으로 넘어오는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사실상 유력 인사들의 여권 내 인력 재배치가 일단락된 셈이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강원 춘천 출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서울), 정경두 국방부 장관(경남 진주),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전) 등이 총선 차출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하지만 개각 폭을 확대하면 '인사청문 리스크'가 총선 약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인 유은혜(재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3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총선 출마를 위한 '친정 복귀' 여부가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중진들의 입각과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총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자연스러운 인적 쇄신의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 정 후보자와 추 지명자의 입각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가 확정된

민주당 현역 의원은 13명으로 늘어났다.

지역구 의원 중에는 이해찬 대표(7선), 원혜영 의원(5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선), 백재현 의원(3선), 서형수·표창원(초선)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는다. 비례대표 중에는 김성수·이용득·이철희·계운경·최은영 의원 등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강창일 의원(4선)이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선)도 입각 시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가 최종 확정돼 지역구 의원 20명 가량이 추가로 출마하지 않게 되면, 최종적인 총선 '물감' 규모는 최소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與,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고발

홍익표 "한국당·공화당, 극우단체 동원 폭력 유도·방조"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 구탄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17일 오후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을 수수방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폭력에 동원된 우리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의원들에게 지시한 심재철 원내대표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해 폭력사태를 유도·방조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민주당 설훈·홍영표 의원 등에게 폭력과 위협을 가한 성명불상의 사람들, 정의당 당원 및 국회의원직 직위 등에 유선과 폭력을 가한 성

명불상의 사람들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고발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 혐의로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었다.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조 대표에 대해서는 각 범죄 혐의에 공모하고 교사·방조해 국회 침탈행위를 주조하고 선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민주·정의·평화·대안신당 "환영"

"민생 해결·국민 통합 기대"...한국당은 "독재 선언" 반발

여야 '정세균 임명' 반응

여야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극도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가 '책임자'라고 평가하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한 독재 선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민생과 경제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때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책임자라 판단하며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 후보자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정치적 역량은 국민을 하나로 묶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데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수 야당들도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표한 가운데 정의당과 대안신당의 경우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하는 것은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쌓아온 '6선'의 경험과 역량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충분히 발휘되기를 기대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추후 청문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절차를 꼼꼼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생이 어렵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총리로서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청와대에 끌려 다니지 않고,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는 총리로 제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6선 의원에 국회의장, 당 대표, 장관을 역임하며 경륜을 두루 갖춘 만큼 총리로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면서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삼권분립' 우려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이런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너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며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선거법 결론 내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실에서 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선거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당 대표급 지도자 힘지 나가라"

총선기획단 기자회견...黃에 대해선 "지도자가 판단"

자유한국당이 17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당 대표급 지도자들에게 '전략적 지역'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내년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에 나온 한국당의 이 같은 발표는 당내 대권 주자 및 유력 인사들에게 사실상 '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일부 반발은 부를 전망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를 지냈거나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큰 정치인은 당과 협의해 전략적 거점지역에 출마해 이번 총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략적 거점지역이란 20대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한국당의 자체 여론조사 및 지역평가 결과 중량감

있는 한국당 주자가 나설 경우 역전이 가능한 지역구를 의미한다.

한 총선기획단 관계자는 "전략 지역은 일반적으로 한국당이 당선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곳 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요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전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혹은 대구 출마를 염두에 둔 홍준표 전 대표 등이 '힘지 출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진복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힘지 출마 여부에 대해선 "지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해당하면 (추후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조국 "유재수 검찰중단 최종책임 내게 있다"

변호인단 통해 입장표명... "직권남용 잘못된 프레임 확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살펴본던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됐던 것에 대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1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

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 백운우(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모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